



철도 민영화 저지! 승리의 열쇠는 단결 파업!

한판 싸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12월 10일로 잡았다. 이제 더 이상 투쟁을 미룰 수 없다.

반대 여론이 두려워 꾀수를 부려 만든 철도 민영화 계획은 발표될 때부터 누더기였다. 독일식 모델로 포장했으나 실제로는 민영화 실패의 대표 사례인 영국식에 가까웠다.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근거리 설립될 수서발 KTX 회사에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70퍼센트의 자본 투자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연금 측은 '이야기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외국 자본에게 철도 개방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서비스 개방 확대 방안이 담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개정안이 통과되고,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7개와 지방공기업, 철도공사가 포함돼 있어

개정안정서를 WTO에 제출하면 철도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다.

외주화, 인력감축, 구조조정

수서발KTX 법인 설립 이후의 수순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철도공사가 여섯 개의 자회사로 조각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회사 간 비용 절감 경쟁이 시작되어 외주화와 인력감축 경쟁이 벌어진다.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동료 간 경쟁도 더욱 심해진다.

이미 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공사의 자회사들에서 현실로 드러난 '노동자 쥐어짜기'가 모든 철도노동자들에게 확대될 것이다. 당장 민간 기업에 자회사가 매각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철도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분할된 자회사의 매각은 식은 죽 먹기다.

흔들리지 않는 파업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다. 오랜 시간 만들어 온 조합원들의 결의와 파업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전면 파업이 아닌 필공파업을 결정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투쟁방향이 결정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모든 힘, 또 시민사회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위력적인 파업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과 직종을 넘어선 단결로 투쟁 지침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도노동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파업을 경험했다. 파업 와해 세력은 노동자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 소문과 함께 개별적인 회유와 협박 공작을 펼친다. 필공파업을 해도 보수언론과 박근혜 정부는 '불법 파업' 공세를 펼친다. 흔들리는 기세가 보이면 공권력 투입도 거론한다.

그러나 파업 대오가 단결한다면 와해 공작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동자가 결집하여 기세를 보여준다면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커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싸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파업 대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반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와 100만인 서명을 통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여론을 눈과 귀로도 확인했다.

'수서발KTX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지난 2년 간 진행되어 온 투쟁은 철도노동조합이 사회적 연대 형성에 힘을 써온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드세지는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 있는 싸움은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단결 투쟁으로 민영화를 막자!

해고와 징계를 감수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승리한 투쟁은 징계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겨야 한다. 나와 동지를 믿고 머리띠를 힘차게 묶자.

철도노동자의 곁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인천공항, 연금, 가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저 말고 연대해 함께 싸우자!

승리의 열쇠는 단결 투쟁이다!

연대하여 대담하게!

학교비정규직 · 인천공항 · 연금 · 가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폭주하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겨울바람처럼 매섭게 폭주하고 있다. 대선 개입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비판 세력을 모두 증복좌파로 몰아세우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더니, 철도·가스 등 핵심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900만 비정규직은 나 몰라라 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파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꿈틀거리고 있다. 철도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인천공항, 국민연금,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 도입,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뒤엎고 무기계약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등을 계약 해지하여 대량 해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4~15일에 이어서 29일에도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1월 16~17일 경고 파업에 이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노동자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슈퍼갑’ 인천공항공사를 바꾸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선포다.

연금 개악, 가스 민영화 저지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차별을 받게 만들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축소하고 금액도 갈수록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대로라면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연금 노동자들은 11월 27일부터 순환 파업에 돌입하였고 12월 중순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가스공사 노동자들도 민영화 저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2일 가스 민영화 저지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새



누리당의 ‘가스민영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12월 중순에 파업에 들어간다. 가스민영화법이 통과되면 재벌들에게 천연가스의 도입과 판매가 대대적으로 허용되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2배 폭등하게 된다.

12월 투쟁의 물결을 만들자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민영화 저지! 노

동자 하나하나의 절박한 요구이고 또한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요구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싸움은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 전선을 확대할 때만 각개격파 당하지 않고 확실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연대하여 대담하게 싸울 때 파업의 힘은 더욱 커진다. 노동자들의 연대로 그리고 전 국민의 지지로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가자.

공공기관 부채, 누구 책임인가?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 착수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과다부채, 과잉복지는 사실인가?

실패한 민영화 정책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부채로 돌아왔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공항철도의 승객이 예상치의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떠안은 부채가 1조2천억원에 달했다.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할 PSO 보조금 7천억원도 지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를 키웠다.

가스공사도 민영화 정책의 실패로 큰 부채를 떠안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정부가 가스 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가스공사의 손실은 11조6천억원에 이른다. 민영화를 위한 장기계약 불허로 발생한 손실이 8조2천억원, 인위적인 수입 경쟁으로 발생한 손실이 2조4천억원, 민간 기업이 포기한 물량을 급하게 수입하다가

발생한 손실이 1조원이었다.

노동 탄압을 위한 지렛대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기관 예산지침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강력히 통제해왔다. 또한 경영평가와 각종 감사로 정부 지침을 어길 수 없게 만들었다. 철도, 발전의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 총원이 안 되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과잉복지’를 공격하는 것은 부채를 빌미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다. 공공

기관 개혁의 칼날은 노동자를 겨누고 있다.

철도 노동자, 앞장서 싸우자

결국 박근혜 정부의 ‘파티’ 운운은 국민의 불만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돌리고,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공공부문은 수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이다. 노동 탄압과 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